

21세기에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鄭海沅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정부패는 인류사와 더불어 이어져 온 가장 큰 사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는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의 근절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을 영원히 접어 둘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패 관행은 과거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심화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부패가 만연되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 반대 급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권력형 부패가 관행화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연고주의, 파벌주의, 온정주의 의식은 각종 청탁과 로비 관행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민간기구 중의 하나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금년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99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여타 부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한다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2003년 부패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부터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자금 345천불을 확보하여 세무, 경찰, 건설, 건축, 식품위생, 환경 등 가장 부패가 심하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문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21세기 선진권 진입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개혁과제이다.

판단되는 6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 8월에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분야는 식품접객업소 특히, 술을 파는 단란 및 유흥주점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야를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국민 개개인의 합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독립성을 갖춘 민간위원회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앞으로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난 8월 발표한 세무, 건축, 건설, 위생, 환경, 경찰 등 6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교육·조달·병무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감시·고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를 다양화·제도화하며, 반부패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의 한 축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대책과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문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21세기 선진권 진입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개혁과제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부패척결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1999년이 우리 나라 부패척결에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부패척결작업을 위해 합심 노력하여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해 나갑시다. 